



좁은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뜻으로, 모든 법정과 재판소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재판관이 법을 공평하게 운용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법치국가의 입헌적 조치와 절차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란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특수한 지위의 사람이나 그들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이 그 법을 준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권리의 평등’은 평등이 한 걸음 더 진전하였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옛 신분 사회의 차별을 전반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법 앞의 평등’ 사상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헌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은 특수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정된 사법적 평등의 한 형태인 반면, ‘권리의 평등’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적 권리들의 평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 성,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들 모두가, 또 그것들만이,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권리의 평등’은 여러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새로운 평등 개념을 생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 물론 ‘권리의 평등’이 무한히 확장하게 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오랜 전통 관념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헌법 체계 아래 모든 시민에게 귀속되는 조건들, 즉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인간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

[A] 1930년 영국 정부는 ‘소금법’으로 인도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소금법이란, 소금은 반드시 영국에서 수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으로서, 영국은 50%의 높은 세금을 붙여 소금을 팔았다. 소금세가 너무 높아 가난한 농민은 소금을 사 먹지도 못하였다. 간디는 영국 정부에 ‘소금법’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제자들과 함께 평화적 행진을 시작하여 행진 마지막에는 직접 소금을 만들기도 했다. 행진이 끝날 때쯤 약 6만여 명의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간디 역시 체포되었다.

[B] 일부 미국 백인들은 전 과목에서 A를 받는 그들의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학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소수자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입학 결정은 오로지 학업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자 우대조치가 없다 할지라도, 대학에서는 학점 외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예술적 재능, 지역 다양성 등을 입학 기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한 대학은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지도력 훈련이 당연히 포함된다. 최근 들어 중요한 시민적 권리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인종 차별은 존재한다. 대학들이 입학 허가에서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인종과 종족, 성별을 고려 기준으로 삼는 소수자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